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술유용으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 부과 -
- 손해액 산정기준 신설을 통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 완화 -

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은 현재는 법상 배상한도가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배상액이 실제로는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낮게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유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한도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되었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보복조치 등 5개 행위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는 기존 3배 이내로 유지

다음으로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은,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의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특허법 등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산정기준을 하도급분야에 맞게 도입하여 피해기업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기술유용으로 인한 피해기업의 손해액에는 기술유용행위가 없었을 경우 피해기업이 생산규모 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뿐만 아니라 생산규모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술을 탈취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여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기술탈취 기업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제3자가 얻은 이익도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손해액 산정기준은 하도급법상 물품위탁뿐만 아니라 용역위탁에서의 기술유용행위에도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강화(손해액의 5배 이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손해액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유용 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술유용 기업의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이 상향됨에 따라 배상액이 현실화되는 동시에 기술탈취가 억제되고, 또한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이 도입됨으로써 중소 피해기업의 손해액 입증부담이 완화된다는 기대가 커지고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1. 개정 하도급법 주요 내용
2. 개정 하도급법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보를 (044-200-4945)
	기업거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현록 (044-200-4952)

붙임 1 개정 하도급법 주요 내용

1. 개정 배경 및 내용

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하도급법 제35조 개정)

□ (개정 배경) 기술유용 행위 억제 및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 현실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필요

* 2011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국내 최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기술유용행위에 도입

○ 현행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기술유용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지속 발생

○ 기술유용에 대해 최대 2배 배상만 인정하는 등 과소 배상 경향 有

□ (개정 내용)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가능

나.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 (하도급법 제35조의6 신설)

□ (개정 배경) 기술유용 피해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기술유출 피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손해 산정 및 입증 곤란 때문이라고 밝힘 (2022년 중기부 실태조사 결과)

○ 특허법 등에서 손해액 산정 기준이 기 도입되어 운영 중

□ (개정 내용) 특허법 등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하도급분야에 적용 가능한 손해액 산정기준 도입

<손해액 산정 주요 내용>

기본 산정기준	○ 피해기업의 생산규모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자료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폭넓은 피해구제 가능
대가 수준	○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통상 대가'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 합리적 대가 ' 수준으로 규정
상품 범위	○ 하도급법상 업무 위탁범위에 용역도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목적물의 범위를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까지 포함
추정 기준	○ 기술자료 유용이 원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해당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사업자 이익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3자가 얻은 이익도 포함

2.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손해배상 책임 강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손해액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면 기술유용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 강화를 통해 기술탈취가 억제되고, 새로 도입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해 피해기업의 손해액 입증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현행	개정안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생략)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 ----- ----- -----
<신설>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
<신설>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 (이하 이 조에서 “기술유평해사업자”라 한다)가 제35조에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제12조의3제4항의 위반행위(이하 “침해행위”라고 한다)를 하게 한 목적물등을 판매·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기술유평해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목적물 등의 판매·제공 규모(기술유평해사업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제공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를 뺀 규모) 중 기술유평해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할 수 있었던 목적물 등의 규모에서 실제 판매·제공한 목적물 등의 규모를 뺀 나머지 규모를 넘지 아니하는 목적물 등의 규모를 기술유평해사업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제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

2. 그 목적물등의 판매·제공 규모 중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할 수 있었던 목적물등의 규모에서 실제 판매·제공한 목적물 등의 규모를 뺀 규모를 넘는 규모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가 있는 경우 그 규모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액

②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기술유용피해사업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신 설>

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침해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액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유용피해사업

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